

시민 뜻 따르자니 합의 파기?...시·도 상생 부정적 영향 '부담'

광주민간공항 이전 여론조사 결과와 전망

광주시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예상대로 "민간공항만 전남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를 압도적으로 선택하면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018년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합의'를 지킬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어렵사리 시작된 가운데 발표된 여론조사로 사실상 전남도와 군공항 이전 후보지 시·군을 '압박'하는 동시에 시장의 향후 행보에 근거를 마련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 시장은 최근 (시민권익위) 건의 내용에 대해 시민 의견, 전남도와와의 상생, 광주·전남의 병영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시민 의견을 중시한다면 합의를 파기해야 하고, 전남도와와의 상생이나 공동 병영을 위한다면 건의 내용을 불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민권익위 운영 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1개월 안에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그동안 시는 14차례의 정책 권고를 모두 이행했다는 점도 이 시장의 부담이다.

이용섭 시장 한 달내 결정해야 전남도·군공항 후보지 시·군 압박 행정통합 용역때까지 유예 관측도 전남도, 공식 논평없이 불편 기색

일각에서는 1년간 진행되는 광주전남연구원의 행정통합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간공항 이전을 유예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광주·전남 사이를 가로막아왔던 '공항 문제'가 민선 7기에서도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광주 시장과 전남지사간 '합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의 기반이 되는 광주·전남 간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은 전남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1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른 시민권익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도가 나서도 시·군이 반대하면 무리해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다. 먼저 주민수용성, 즉 이전후보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광주가 이미 예상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이날 도

당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애초 시민 여론조사를 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문제는 상생정신을 가지고 풀어야 할 문제"라며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면 이전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제3차 공항 정책 기본 계획에 공항 통합 추진 내용을 담아 고시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서도 활주로 연장, 청사 리모델링 등 기반·편의 시설에 700억원을 투입해 대비하고 있는 만큼 이런 노력을 결실을 보도록 반드시 협약은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더는 광주 시민권익위원회의 이름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광주·전남의 통합을 말로만 아니라 하나씩 실천하는 광주시의 모습을 보여야만 한 뿌리, 공동운명체가 됨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최근 3년간 전남지역 면허 취소·정지 의사 28명

리베이트 수수·진료비 거짓 청구 등 김기태 의원 "의사단체 자정노력"

전남에서 최근 3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의사가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확보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의사는 28명으로 파악됐다.

2018년 자격정지 14명, 2019년 자격정지 4명, 2020년 자격정지 7명, 면허취소 3명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 3명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거나, 의료기관을 중보으로 개설하다 적발된 이들이다. 두 의사 모두 면허 박탈에 앞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았다.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허위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다 적발된 의사도 면허가 취소됐다. 이 의사는 징역 8개

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도 받았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25명의 의사는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등 8명, 리베이트 수수 7명, 진료비 거짓청구 3명, 명의상 원장 근무(면허 대여) 2명, 본인부담금 환인 등 불법 환자 유인 2명,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료행위 지시 1명, 증명서 거짓 작성 발급 1명, 처방전 타인 명의 발급 1명 등이다. 이들은 면허(자격) 정지 처분에 앞서 법원에서 벌금 등 형벌을 선고받았으며, 자격 정지 기간은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8개월로 나타났다.

김기태 의원은 "전남도가 제출한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된 불법 행위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리베이트 수수는 예사이고 심지어 면허 대령, 무면허 의료인 의료행위 지시까지 포함돼 있다"며 "의사단체는 정부의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공공성 강화정책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의료인들의 일탈을 막는 자정 노력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1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유오빌딩에서 열린 광주시창업캠프 개관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AI 입주기업에서 개발한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인공지능 창업 붐 광주, '베이스캠프' 열었다

1호 개관...35개 스타트업 동지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에 'AI 창업 캠프'가 동지를 틀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이날 광주 동구 금남로에 'AI창업캠프 1호' 개관식을 가졌다. 광주시는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 7월 목표로 'AI 창업캠프 2호'를 준비중이다. 'AI창업캠프 1호'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전에 인공지능 분야 예비창업자 양성

과 창업기업의 집적화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최근 AI 기업들이 앞다퉀 광주로 몰려 오고, AI기업 창업 붐까지 일면서 공간부족 현상과 AI집적화를 위한 공간이 절실해졌다. 'AI 창업캠프'는 창업자들에게 특화된 최적의 위치와 시설 구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산업단지를 벗어나 교통과 문화시설 등이 발달한 도심인 금남로4가역에 위치해 있다. 또한, 보안시설을 갖춘 독립형 입주공간과 교육장·회의실·헬스장

·수면실·커뮤니티공간 등의 편의시설도 갖췄다. 창업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곳은 이미 입주자 100% 완료됐다. 광주시는 지난달 35개의 예비창업 기업을 비롯한 스타트업을 공모해 선정했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입주기업에 성장단계(예비창업→초기창업→성장기업)에 맞는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맞춤형 창업프로그램으로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인력 매칭, (시)제품 개발 지원, 투자 펀드, 사업화 컨설팅, 글로벌 진출 지원, 데이터센터 및 실증장비 활용 지원 등이 마련됐다. 이밖에 창업 멘토링·컨설팅, 협업 네트워크 구축, 시장진출 지원 등 적극적인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공공기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점검

공사·공단 등 28개 기관

광주시가 공공기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최근 광주 과학기술진흥원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실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자 뒤늦게 점검에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오는 17일까지 공사·공단 4개, 출연기관 18개, 기타 6개 등 유관 기관 28곳을 대상으로 시간외근무수당(휴일수당 포함) 지급 실태를 점

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각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지도·감독 부서에 점검 계획 등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도·감독 부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련 규정, 부정수급자 제제 근거 운영 여부, 지급 대상, 금액·시간 등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지문인식시스템 운영 등 부소장 승인 방법에 대한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해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름,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으로 오세요!

색
오
感

순창이 참좋다.co
Season Your Life with Sunchang